

여야, 북미회담 공방 “냉전 사고” vs “신 북풍”

한국당, 정상 회담 일정 전당대회와 겹쳐 ‘의심’

강경대치 지속...2월 국회 전망 여전히 ‘먹구름’

여야는 설 연휴를 보내고 모처럼 업무를 재개한 7일에도 날카로운 대치를 지속하며 아직 개회하지 못한 2월 임시국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여야는 특히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발표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당적 협력을 강조했

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 북풍’을 기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 회의에서 “수구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평화는 끌어낼 수 없다”며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처럼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갈 수도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신 북풍으로 재미를 본 정부·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도 신 북풍을 계획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관련, “한국당 전당대회(2월 27일) 날

짜와 겹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며 “국민들도 세 번 정도 되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이런 ‘의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북미회담 날짜를 놓고 한국당의 상상력이 가관”이라며 “아무리 정쟁에 눈이 멀어도 한반도 평화에 재부리는 똬니는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놓고서도 대치를 지속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

결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대선불복 프레임, 한국당은 재판불복과 민심불복 프레임을 각각 이어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야당은 민생과 무관한 정쟁과 대선 불복의 망상에서 벗어나 통 큰 민생정치를 해달라”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국민 안전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에선 대야 강경발언이 등시다발로 쏟아졌다.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2017년 4월 부인 명의로 대전역 맞은편 상가를 11억5천만원에 매입

한 뒤 대전역 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관계부처와 공무원에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남용했다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에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듯하다”며 “국민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2월 국회를 열자”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대선불복 프레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집권당 대표가 야당을 향해 대선불복을 한다고 한 발언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저지른 가혹한 한 여론조작의 범죄를 숨기고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정치 책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스트립바 방문 의혹 민주당, 최고일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 방문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고일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최 의원의 징계안을 낼 예정”이라며 “대표 발의자는 당 전국여성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라고 전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원내대표단,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김석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기로 한 가운데 최 의원의 징계안도 함께 다뤄질 주목된다. /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의장으로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주력

“한국당 대선불복” 공세 지속 사법개혁 국민여론에 힘 얻어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법개혁의 고삐도 바짝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설 민심 청취 결과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고 자체 분석하고, 당분간 지도부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당력을 쏟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애초 연휴가 끝난 7일 김 지사를 면회하려다 내부 검토 끝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농단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선고 이틀남인 지난달 31일 김 지사를 면회했고, 다른 의원들도 번갈아 김 지사를 면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판결문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 카드 등을 쥐고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한국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관련 간담회에서 “사법농단 대책위에서 (법관탄핵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며 “(이 방안)을 배제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정협 수석사무부총장은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뼈아픈 질책이 있었다”며 “앞으로 당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관탄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른 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할뿐더러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비치고, 사법부를 자극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탄핵 2년 만에 되살아나는 박근혜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주자들 잇따라 거론

약 2년 전 탄핵으로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가 하면, 박 전 대통령과의 과거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기도 한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당권 주자들의 ‘성지순례’ 코스라 할 정도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화두는 ‘박근혜’ 인 셈이다.

‘박근혜 되살리기’에 가장 먼저 불을 당긴 건 홍준표 전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적지 않다”고 했다.

홍 전 대표와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석방 카드를 들고나오자,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은 오히려 대적점에 섰다.

오 전 시장은 7일 당대표 출마 선언

에서 “정치인 박근혜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비박(비박근혜)계 유일·선두 주자임을 자임했다.

그동안 한국당에서 금기어나 마찬가지로 지었던 ‘박근혜’나 ‘탄핵’이 재등장한 것은 단순한 ‘박근혜 마케팅’ 이상이 라는 계당 안팎의 분석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당내 세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2017년 7·3 전당대회 당시 16만여명이었던 책임당원은 현재 34만여명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다.

당대표 선거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를 제외하면 대부분 책임당

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가 나머지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당에 충성도가 높은 책임당원들 사이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들 ‘콘크리트 지지층’을 잡지 않고서는 당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홍 전 대표가 2017년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제명’ 조치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킴으로써 당과의 연결고리를 끊고서도 이번 전대에서 박근혜 석방 운동의 기수를 자처한 것도 이런 당내 여론 지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 전대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등장한 것을 놓고 한국당이 ‘국정농단 세력’ 굴레에서 벗어나 민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문 의장 “국회 모습 부끄럽기 짝이 없어”

문화상 국회의장은 7일 국민이 바라는 개혁 과제들의 제도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낮 국회에서 개최한 여야 국방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20대 국회는 전반기에 영원히 역사에 남을 일을 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동원된 시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혁 과제들에 대한) 제도화에 실패하면 우리가 왜 대통령을 탄핵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하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현재 모습은 비정상적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놓고 해야 한다”고 개탄했다. /연합뉴스

신축 원룸 매매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1층(상가),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매가 8억 6천만 (용2억5천, 보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법률경매

대신경매

상가건물 / 근린주택

- 1. 북구 삼각동 (3층 상가주택) 토 116평 건 332평 광주 국제고 전남여성 1분 (코너) ▶ 감평가 9억8천 - 최저가 6억3천
- 2. 남구 백운동 (상가주택) 토 95평 건 192평, 대단위 아파트 위치 ▶ 감평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 3. 서구 양동 (상가주택) 토 138평 건 469평 ▶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 4.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 127평 건 332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3천

근린상가

- 1. 상무지구 세경아울렛 2층 (전용 23평) ▶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 2. 북구 문운동 (7층중 6층) (전용 226평) ▶ 감평가 14억8천 - 최저가 6억6천
- 3. 상무지구 7층중 6층 (전용 60평)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8백
- 4. 상무지구 아파트상가 1층 (전용 35평) ▶ 감평가 16억3천 - 최저가 7억3천
- 5. 행남동 주차타워 1층 상가 (전용 15평) ▶ 감평가 4억9천 - 최저가 3억4천

경매 교육 2월 개강 선착순 모집 (기초부터 - 실전 전문)

062-382-5500